

▶ 가점 / 감점 방식

- 써야 할 내용 안쓰면 감점, 쓰면 안되는 내용 쓰면 감점 (주의해야 할 내용은 보통 메신저, 쪽지 등에서 많이 나옴)
- 정량 채점 기준은 단락마다 **있어야할 키워드**, 있으면 안되는 키워드로 **채점** → **제시문에 나온 키워드&문구 그대로 쓰기** (있어보이게 변형, 포괄단어 쓰지 말기)

정량 → 정성 (필요한 지대로 체크 보면) B, C 소인? (100 → 500 점) 4등 보지 않음. 외국 보자 + 변형해 줘.

항 목	논리·정확성	명확·간결성	완결성	합 계
배 점	40점	30점	30점	100점
정량평가	(40)	(10)	-	(50)
정성평가	-	-	(20)	(50)

- 정량평가 : 키워드 채점
- 정성평가 : 평가위원 5명 [위원장1, 위원4] 개별평가 및 합산 평균
- 명확·간결성 : (S : 20, A : 18, B : 16, C : 14, D : 12)
- 완결성 : (S : 30, A : 27, B : 24, C : 21, D : 18)
- * 2개 등급 이상 차이시, 평가위원간 등급협의 조정
(ex. 1개 보고서 평가에 대해 S-A등급, A-D등급 발생시, 위원간 등급 상하향 협의조정)

■ 채점기준 (해당 키워드 누락시 감점) (논리·정확성 40점)

1. 제목(5)

구 분	키워드1	키워드2
-2	ESG 경영	추진방안
-1	추진전략, 전략추진	지속가능, 지속성장

2. 검토배경(5)

구 분	키워드	비 고
-2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지속성장)
-3	사회적책임이행	(이해관계자 요구, 비재무적 가치)

3. 추진현황(12)

□ 대외(5)

구 분	키워드	비 고
-2	ESG경영이행요구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지속성장)
-1	정보공시 의무강화, 탄소감축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1	사회 환경적 책임	(비재무적가치, 사회적가치)

□ 대내(7)

구 분	키워드	비 고
-1	온실가스 과다배출	(화력위주 발전, 탄소중립 목표달성 미흡)
-1	친환경 기술수준 미흡	(CCUS 기술부족, 미확보)
-1	지역사회 기여부족	(지역사회 투자, 지원 부족)
-1	ESG 정보공개 부족	(공시제도 미비)
-1	윤리경영 제도 미비	(윤리준법경영 미정착)
-2	안전관리 최우선 경영목표	(경영진 안전관리 의지, 안전관리 중요성 부각)

4. 추진전략(16)

□ 환경(7) → 석탄발전 감축으로 동년 CCUS 실험도 1기면 완성.

구 분	키워드	비 고
-2	석탄발전 감축	(=온실가스 저감)
-1	CCUS 상용화	(=CCUS 강화)
-2	해상풍력 참여	(=해상풍력 개발)
-2	연계인프라 확충	(=전력망 보강)

□ 사회(5)

구 분	키워드	비 고
-1	에너지산업지구 구축	
-1	에너지스타트업 지원	
-3	안전관리 핵심성과지표(KPI)	(핵심성과지표 누락시 -1)

□ 지배구조(4)

구 분	키워드	비 고
-2	ESG 경영정보 공시의무화	(=제도화)
-2	윤리준법 경영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윤리준법 경영 프로그램 또는 인증제도)

4. 향후계획(2)

구 분	키워드	비 고
-1	국내IT사 벤치마킹	(기한 누락, 오류시 -1)
-1	ESG 마스터플랜 수립	

■ 불필요정보 감점 (명확·간결성 10점)

구 분	키워드	비 고
대내외 (전당 -1) [최대 -3]	재무분야 관련기술	(ex. 재무건전성악화)
	디지털전환, 플랫폼모델	
	재무개선	(원가절감, 경영효율화, 수익창출 등 결론도출)
전략 (전당 -1) [최대 -3]	ESG 위원회 설치	
	해외발전 관련	
	디지털 전환, 플랫폼,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인력자원관리, 협박시 등반상장	

전술 회사 공자 수

▶ 배경지식 익히기

- 확실히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은 집중도가 다름
- 연도마다 출제 스타일이 다르지만 최근 2년간 주로 현재 이슈되고 있는 전력산업에 대한 내용이 출제됨
- 경영연구원 보고서는 회사 현안 관련 트렌드 파악에 아주 좋음

KEMRI

연구원소개

수시보

KEMRI

연구원소개

수시보고서

연구과제보고서

연구자료

수시보고서

연구과제보고서

KEMRI Report

글로벌동향

사내외 발표자료

수시보고서

년도

전체

번호

제 목

702 (25-41) DC배전망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적용방향 연구 (0)

701 (25-40) 해외 통합 배전망 계획 사례 조사 (0)

700 (25-39) 에너지원 간 통합자원계획 필요

699 (25-38) 송전선로의 동적인 열적한계용:

698 (25-37) 『1·3·5 전략』을 통해 본 북부

697 (25-36) 2025년 3차 경영정보보고서(급변

KEMRI Review

년도

전체

번호

제 목

292 (25-8) 국내 전기차 충전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

291 (25-7)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

290 (25-6) 지역 유연성 시장의 해외 운영 사례 조사 및 시사점

289 (25-5) 국내·외 전력망 건설 대안 기술(NWA) 동향 및 활성화 방안

288 (25-4) 해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구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87 (25-3) 부하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해외 최신 동향

★ 추가로 우리회사 문제지 만큼 깔끔하게 틀 잡아주는 문제지가 없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든 괜히 문제될 일 안 만들려고 더 깔끔하게 낼 듯), 괜히 다른 회사 기출문제나 공무원 시험 등 타회사 문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n번 반복 풀이 하면서 나의 루틴,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히고 최대한 모범답안에 가까워지도록 나의 문장 구성을 맞추고 연습해가는 과정이 필요함**

TIP.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항목들은 먼저 써놓고 채워나가는 연습

※ 우리회사 시험은 문제에서 제목, 대제목 등 틀을 잡고 시작할 수 있게끔 냄

→ 시험지 받으면 먼저 보고서 제목, 대제목 써놓고 읽으면서 채워나가기

2025년 3직급 일반승진 역량평가 문제지

2024. 12. 7(토)

문 제

1. 보고서 작성배경 및 상황

- 한국의 'A기업(가상의 회사)'은 발전부문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전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송변전 설비계획·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이다. 'A기업'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전력공급과 재생e 제동연계 지연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력망 적기 건설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
- 귀하는 'A기업' 전력계통본부 제동정책처 제동정책부 '박 차장'이며, 산업부와 국회로부터 전력망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동정책처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예정이다. 주어진 참고/고려사항과 제시자료를 활용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대응전략 보고서를 1장으로 작성하시오.

○ (지시사항) 전력망 건설 지연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 보고서 작성 및 평가기준

- 제시자료를 토대로 A기업의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을 위해 '추진배경',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응전략'과 '향후계획'을 보고할 것
- 작성 및 평가 주요기준
 - 논리·정확성 : 보고서 전체의 논리가 일관되고 구체적 근거에 의거하여 작성
 - 명확·간결성 :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내용 위주로 명확·간결하게 작성
 - 완결성 : 보고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완결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

3. 참고 및 고려사항

- A기업 전력계통본부 조직도



전력망 건설 지연 단·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추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 CEO 메시지에서 주로 추진배경,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 언급

→ CEO 메시지 봤을 때 딱 봐도 이건 제목에 대한 배경이다 싶으면 일단 체크

→ 전사 행사,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등 CEO가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향후 계획

제시자료 1 : A기업 CEO 소통 메시지 (2024. 12. 5)

보낸사람	김○○<ceo@aepco.co.kr>
보낸일시	2024. 12. 5. 09:10
제 목	[CEO 소통 메시지] 사랑하는 A기업 가족 여러분
A기업 가족 여러분,	
지난 주, 우리회사는 대한민국 우수경영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고생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역시도 A기업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 중략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 등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 및 인허가 지연 등 전력망 확충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력망 건설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을 위한 전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6일에는 전력망 척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력망 척기 건설은 우리 회사 직원 모두의 일입니다. 회사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산업부의 전력망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소중한 동료들과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김○○ 드림.	

전력망 건설 지연 단·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촉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척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 비슷한 느낌으로 처장 → 부장 메일에서도 추진배경, 향후 계획 추출 가능
 → CEO 중심의 일정으로 정리해야함
 (12.13 사장님께 보고, 12.19 BP발표 자료 준비는 함정 → 감점 요소)

제시자료 2 : 계통정책처장 발송 이메일 (2024. 12. 5)

보낸사람	계통정책처장 <kim@aepco.co.kr>
받는사람	계통정책부장 <lee@aepco.co.kr>
참 조	계통정책부 박 차장 <park@aepco.co.kr>
보낸일시	2024. 12. 5 10:34
제 목	[긴급] 대응전략 수립 보고서 등 작성 요청
<p>이 부장님,</p> <p>사장님이 오늘 [CEO 소통 메시지]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하셨으며, 해당 대응전략은 산업부와 국회의 요청으로 사장님께서 12월 30일에 직접 보고 예정입니다.</p> <p>이에 대한 보고자료는 계통정책처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라는 사장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12월 13일 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작성 부탁드립니다.</p> <p>연말에 힘들겠지만, 전력망 건설지연은 국책사업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경영 현안인 만큼 내실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그리고 12월 19일에 있는 본부장님 주관 '24년 경영평가보고서 BP' 발표 자료 준비는 이○○ 차장에게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전달하여 확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계통정책처장 김○○ 드림</p>	

전력망 건설 지연 단 · 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촉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 부장과 컴케에서 보통 2, 3번 보고서 틀 잡힘

→ 너무나 친절하게 꼭지 잡아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니 이것까지 잡아놓고 시작

→ 보통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 (향후 일정은 사장님과 관련된 거로 등등)

제시자료 3 : 계통정책부장 KepTalk 전달사항 (2024. 12. 5)

계통정책부장

박 차장님, 처장님께서 보낸 메일은 보셨나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은 사장님께서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 박 차장님이 신경 써서 작성해 주세요.

추진방향은 '발전계약 해소', '법령 제·개정', '시공기간 단축'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오전 11:21

오전 11:22

박 차장

감사합니다. 부장님! 세부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안 될까요?

계통정책부장

대응전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작성하되, 추진방향의 아이템 세가지를 활용해 주세요. '27년까지 실행이 가능한 방안은 단기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11:25

오전 11:27

박 차장

네 부장님! 그럼

- 단기(~'27년)
- (발전계약 해소)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말씀이죠?

계통정책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추후 일정을 상기하실 수 있게 **사장님과 관련된 향후 계획도** 함께 작성해 주세요.

오후 1:10

오후 1:11

박 차장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력망 건설 지연 단 · 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추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전력망 건설 지연 단·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촉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 보통 대내외 현황이나 추진 방향 등은 **기존 현황 보고서**나 **기업 재무 보고서**에서 많이 나옴

→ 제시자료는 친절하게 순서대로 주지 않음

→ 그렇다고 제시자료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답안지에 순서대로 쓰겠다고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멘붕 올

→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게 중요 (나의 경우, 연습때부터 형광펜으로 단락마다 색깔을 정해놓고 키워드 나왔다 싶으면 색칠하는 걸로 구분하는 연습)

제시자료 5 : 산업부, 전력망 구축계획 보고서 일부 발췌 (2024. 4. 30)

1. 설비계획 현황

-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을 위한 설비계획 수립 : 34.5 조원
 - 무탄소전원(원전, 재생e) 적기 연계를 위한 지역 간 유통선로 보강
 -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10차 계획기간, '22~'36년) 변전소 125개 및 송전선로 15,058C-km 신설]
 - 지역단위 재생e 예측 기반의 선제적 지역망 구축(154kV 82개 변전소)
- 적기·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계획 수립 : 22.0 조원
 - 국가 첨단전략산업 유치지역과 연계한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 15개 변전소 20개 송전선로 건설 (8개 변전소, 10개 송전선로 사업준비 중)

■ 국가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계획 ■

분야	지역	공급용량	송전선로·변전소	주요사업
반도체	울진·영덕	16.9GW	(선로)11개, (변전소)7개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구미	400MW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경주	74MW	(선로)3개, (변전소)3개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이차전지	포항	1.0GW	(선로)2개, (변전소)2개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세한금	800MW	(선로)2개, (변전소)2개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울산	66MW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디스플레이	전남·아산	1.1GW	(선로)2개, (변전소)1개	신장원-동충원 I/L 등 345kV 송전선로 약 6,232C-km 신설

2. 문제점

- 기존의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건설 물량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공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필요
 - 과거 10개년 준공 물량(9GW) 대비 2.2배 급증한 건설 물량(20GW)으로 인해, 현 수준의 시공 자원으로는 적기 건설 한계

제시자료 6 : A기업 전력계통T/F 보고서 발췌 (2024. 11. 7)

발전계약에 따른 계통 및 재무 영향요약

- 발전 동향의 파나나 송전망 설비 동향 부족 등으로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줄이는 것
- (계통) '22년부터 석탄발전 계약 발생 중(0~1.3GW)이며 '27년까지 대응할 신재생e 발전원 추가 진입에 따라 '27년까지 3.6GW 계약 전망

■ 발전·송전용량 및 계약규모 ■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누적발전용량 GW	22.7	25.5	27.9	27.9	28.8	30.6
송전가능용량 GW		21.4		23.5	25.0	27.0
발전계약규모 GW	0~1.3	최대 4.1	최대 6.5	4.4	3.8	3.6

- 발전계약 지역의 내 A발전사·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PPA 제도 도입 및 효과성을 케이블 개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추가 송전능력 확보를 추진중이나 발전계약 해소에 역부족

- (재무) 발전계약으로 저원가 발전기 가동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0.4조원 증가 전망(2배)

- 발전D사 삼척 2,000MW 전년 대비 가동률 급감(80% → 35%) 영향

■ 발전사별 2023년 결산실적 ■

구분	B사	C사	D사	E사	F사
매출액 (억원)	58,425	26,424	23,224	32,178	29,145
영업이익 (억원)	2,842	1,246	162	1,545	1,039
당기순이익 (억원)	1,050	895	-421	1,028	772

- ✓ 발전계약으로 인해 재무실적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제도·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대응책 마련을 통해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필요

제시자료 13 : 전력망 구축 지연 현황 관련 내부보고서 중 (2024.10.7)

-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상 주요 송전선로 건설 지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건설발대에 따른 입지선정 어려움 등을 사유로 평균 5년, 최소 14개월에서 최대 약 10년까지 지연된 사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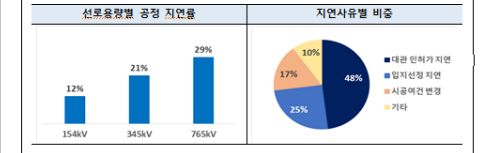
■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상 주요 송전선로(345kV 이상) 구축 지연 사례 ■

송전선로	계획상 준공일	실제 준공일	지연기간(개월)	구축 지연 사유
345kV 신원	2024.04	2025.06	14	인허가 지연
765kV 관양 분기	2020.12	2026.10	70	입지선정 지연
345kV 북진현-신영산	2017.06	2024.12	90	인허가 지연
345kV 위례	2017.06	2026.12	114	인허가 지연
345kV 고성	2020.01	2026.10	81	입지선정 지연
345kV 신가동분기	2020.04	2023.12	44	시공여건 반영
345kV 신원장대	2021.04	2026.12	68	입지선정 지연
345kV 서충남-이인	2021.06	2026.12	90	인허가 지연
345kV 울진C/C·화성	2019.04	2025.06	74	인허가 지연
345kV 신원A·신원B	2023.06	2028.09	63	인허가 지연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정부부처 간 협의 조정 기간 장기화, 주민반대 등을 의식한 지자체의 허가 지연 등 대관 인허가 문제로 파악되며 전체 지연사유 중 48% 점유

- ※ 최근 6개월 내 전력망 구축 지연 관련 행정소송 진전비 2배(10건 증가)
- 또한, 재산권·건강권 침해,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송전선로 입지선정 단계부터 건설 반대에 불협합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선로용량별 공정 지연률 및 지연사유별 비중 ■



전력망 건설 지연 단·중장기 대응전략

1. 추진배경

- 첨단산업 전력수요·재생e 발전 연계 물량 증가로 안정적 전력망 역할 증대
- 전력망 건설지연 대응방안 수립으로 산업부 우려 불식 및 국민 설득 필요

2. 추진방향

- (발전계약 해소) 재무악화 우려 종합대응책 마련, 장·단기 송전능력 확대
- (법령 제·개정)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공기간 단축) 기존 방식으로 급증 건설물량 소화 불가로 대응방안 시급
 - ※ 국가 에너지믹스 및 첨단전력산업 적기·안정적 인프라 구축계획 이행 必

3. 대응전략

- 단기(~'27년) : 단기 송전능력 확대 추진 및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전계약 해소) NWAs 기술 적용 확대 및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유연송전설비 적용 통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추진
 - 광역정전 예방 및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 제약 완화·송전용량 확보 도모
 - (법령 제·개정) 전력망혁신법 제정 및 전원촉진법 개정 적극 추진
 - 전력망혁신위원회 설치로 인허가 관련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제화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지자체 비협조 대응
- 중장기('28년~) : 선로용량 확보 및 건설물량 확대 계획 적극 이행
 - (발전계약 해소) 동적 송전용량 산정기술 적용 및 신뢰도 유지 기준 완화
 - AI·빅데이터 활용 선로용량 한계치까지 허용량 증대 동적용량 방식 도입
 - '송전선로 이중고장 전제'→'단일고장 반영 방식' 변경('30년 6.6GW 완화)
 - (시공기간 단축) 신규 장비 도입 유도 및 해외 인력(송전 전기원) 확보
 - 신규 터널 굴착장비 도입 유도 품셈 개정 및 터널 굴착 시공 속도 향상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대상 조정(법무부 협의), 비자제도 개선 시행 추진

4. 향후계획

-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사 다점대회 개최 : 12월 16일
- '전력망 건설 지연 대응전략' 산업부·국회 대상 CEO 보고 : 12월 30일

※ 대응전략, 추진전략 등은 추진 계획 보고서나 신문기사, 용역결과 자료, 전략보고서, 전략회의자료, 토론회 보고자료 등에서 많이 나옴

→ 마찬가지로 제시자료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답안지에 순서대로 쓰겠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멘붕 올

→ 전체적인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야 함정에 안 빠질 수 있음

→ 내가 알고있는 배경지식보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 제시자료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만 작성

제시자료 8 : A기업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발췌 (2024. 9. 30)

나. NWAs* 기술 적용 확대

*NWAs(Non-Wires Alternatives) : 신규 송전선로 건설 없이 송전망 송전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

□ [배경] ○○지역 발전용량 급증, 선로 건설 장기화로 인해 발전계약 발생

- '24년까지 4개 발전소 신설로 발전용량 27.9GW까지 증가
- □□ 송전선로(8GW, '26년) 건설 전까지 송전능력은 최대 21.4GW 수준
- 최대 6.5GW까지 저원가 발전소 제한운전 우려

□ [추진내용] ○○지역 발전계약 해소를 위한 단기설비보강 대책 수립

- (계통안정화용 ESS) 계통고장으로 발전기 정지 시 계통 최저 주파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 (유연송전설비) 전압 불안정이 유발되는 특정 선로 전력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송전설비* 적용

*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초고속 전압안정화 특수설비(9개소) 설치계획 수립

□ [기대효과] '27년까지 추가 송전용량 2.6GW 확보 가능

제시자료 10 : New에너지 신문 기사 (2024. 12. 2)

NEW 에너지신문

Home> 뉴스 > 전력

A기업 '27년 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추진

A기업(대표이사 사장 김00)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정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A기업은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하여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할 예정이다.

* 저주파수계전기(低周波動繼電器) : 공급된 전력의 주파수가 설정된 값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하는 장치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지역 발전계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7년도까지 1.0GW 송전용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